

與, 전대 준비 논의 착수...당권 경쟁 모드 급속 이동

송영길 이어 김민석 곧 여의도 복귀
정청래, 중순께 대표직 사퇴 가능성
선거 결과에 엇갈린 평가 견제·공방
'지지기반' 호남 공략 경쟁도 스타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차기 당권 경쟁 모드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선거가 미완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 대표가 기대했던 '연임 대세론'의 동력이 약화한 가운데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우회적으로 정 대표에 견제구를 던지면서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 전당대회(전대) 준비 위 설치를 비롯해 전대 준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전대 준비위(전준위)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 50일 전에 설치하게 돼 있다. 통상 후보 등록에 3~4주 걸리기 때문에 전준위 설치는 통상 전대 70~80일 전쯤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전준위 설치 논의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9월 초로 넘어가게 된다.

당내에서는 장소 대관 등의 이유로 9월6일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전대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는 2000년 대선을 2년 정도 앞두고 진행되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당권 주자의 미래는 물론 각 주자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공천 문제도 걸려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이달 중순께 대표직을 내려놓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당 대표가 로망"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김민석 총리는 금명간 총리직 사퇴를 표명하고 여의도 복귀 수순에 들어간다.

최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 송영길 의원이 전대 출마를 위한

물밑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전대 모드로 이동하면서 지방선거 평가가 1차 전장(戰場)이 되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선거 자체는 "전국적인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송 의원은 같은 날 격전지 패배에 대해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서 사실상 정청래 책임론을 언급했다.

김 총리도 전날 광주 연설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가 있다. 승리 공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됐다"면서 우회적으로 정 대표에 견제구를 날렸다.

당내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 총리의 최측근이기도 한 강득구 최고위원

은 선거 결과에 대해 "지도부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좀 더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도 지선 결과와 관련해 각각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경고", "매서운 죽비"라며 정 대표 책임론 제기기에 가세했다.

원내·외 친명계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역시 "이번 선거는 대승이 아니라 절반의 성공"이라며 "당 지도부의 깊은 성찰과 책임 있는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논평을 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 대표의 '전국적인 승리' 발언에 대해 "나태하고 민심과 차가 너무 크다"면서 "전략 실패와 부재의 무거운 책임은 마땅히 당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결과에 대한 공방은 평가위 논의 과정에서 각 계파가 가세하면서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잠재적 당권 주자들의 호남 공략도 가속화되고 있다.

김 총리와 송 의원은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뉴호남포럼'에 나란히 참석하며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정 대표도 지선 기간 호남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공을 들여왔다. 또 당내에 호남발전특위를 설치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선거 기간 전북지사 후보 공천 과정에서 벗어난 갈등으로 현지 여론이 일부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정 대표로서선 인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연합뉴스

청문회·본회의 거쳐 내달 초 전후해 임명 전망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준절차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與 단독과반 인준 큰 무리 없을 듯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향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정식 총리로 임명된다.

7일 이 대통령이 한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공식 지명만 만큼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 대통령이 한 후보자

를 지명한 취지와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내역, 본인과 자녀의 병적 기록, 세금체납, 범죄경력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다.

이 과정에 총리실에 꾸려지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본격적 활동에 착수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치고, 전체 국회심사 절차는 20일 이내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표를 얻어야 통과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제기되는 크고 작은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단독 과반을 이루고 있는 등 여대야소리는 점에서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청문회를 비롯해 인준 통과까지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김민석 총리의 경우 2025년 6월4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되고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달 24~25일 인사청문회가 치러졌으며, 7월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장을 받았다. 지명부터 임명까지 총 29일이 걸렸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여야의 극한 대립 끝에 지명 48일 만에 임명될 수 있었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가 무사히 마무리될 경우 내달 초-중순을 전후로 정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박근혜, '국립묘지 안장 기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7일 "과거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단

순히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배제돼온 국가유공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법' 시행일인 2006년 1월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내란·외환·살인·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김진수기자

李대통령,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제시한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가 담겼다.

내외인 기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견에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초청된다. 정보현(이화여대 경제학과 4학년), 선우영현(인하대 기계공학과 4학년) 씨가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KH MEDICHECK

건강검진

매일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